

전세사기대책 관련 여야 논의사항 및 민주당 입장

1.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임차인 구제와 관련하여, ①경매유예, ②우선매수권, ③공공 매입임대, ④보증금 채권매수 등의 정책수단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최근 정부·여당이 보증금 채권매수를 제외한 세 가지 정책을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조오섭의원과 정의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보증금 채권매입은 적정 평가액을 전제로 전세보증금을 보전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공공 매입임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장을 바꾼 마당에, 정작 야당의 보증금 채권매입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폭을 경직되게 축소하여 ‘100% 보상을 주장하는 포퓰리즘이다.’ 고 비난하는 것은 공색하다.
3. 이를 ‘천원의아침밥’에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따라온 것처럼, 전세사기대책에서도 야당의 선도적 대안제시에 대해 수용하고 따라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선의의 정책경쟁을 악의의 프레임 왜곡으로 변질시키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4. 우리는 정부·여당의 임차인 우선매수안 등을 입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매입안 또한 대다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만큼 민주당 등 야당안과 여당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최적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5. 지난 21일(금)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여당은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우선매수권, 매입임대 등 본질적 해법과 거리가 먼 5개 부수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여당 국토교통위 간사는 27일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를 거부하여 여당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권 내부의 조속한 정리를 요청한다.
6. 민주당은 여야가 내놓은 어느 안도 문제해결을 위한 100% 최적안이라 고집하기보다는 △피해자입장 우선, △신속한 지원, △효율적인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가장 합리적인 법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타 관련법안들, 즉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부동산중개인의 역할 강화 등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4. 24.(월)